충 청

지역정당의 소멸과 중원(中原)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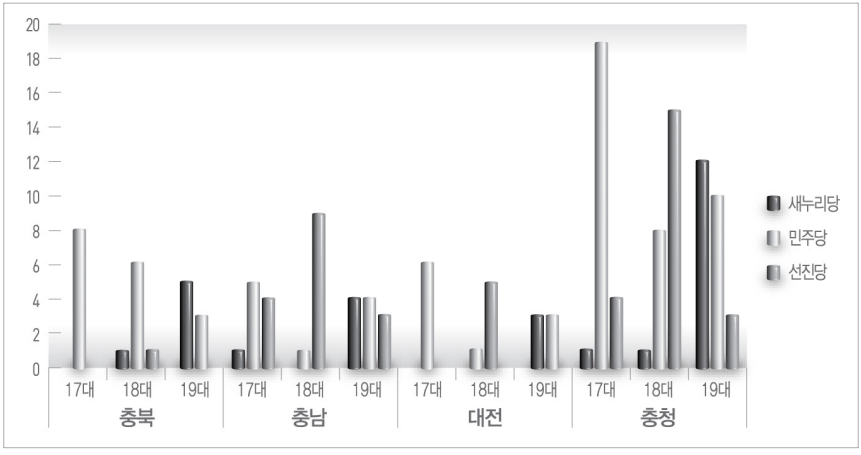
정상호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1. 충청지역의 19대 총선의 특징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예측을 깨고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1]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는 뜻밖의 결과는 [그림 1]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충청과 대전(이하 충청으로 약칭)에서 새누리당의 약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본인도 참여하였던 한겨레 정치전문가 패널 28명 가운데 22명(78.6%)은 민주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1당을 차지할 것을 예측하였다(『한겨레신문』, 2012.4.8). 필자는 여론전문가, 시사평론가, 정치학 교수로 구성된 소위 선거전문가 집단의 예측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自省하고 있다. 첫째는 이들 전문가 집단의 분석 기준과 전망이 수도권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28명의 인사 가운데 수도권 이남의 인사들은 단 한명도 없음이 이를 간접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의 여파의 사례처럼, 보수층의 흐름에 둔감하였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예측 실패는 수도권과 세대변수에 민감하였지만 지역과 보수의 정서에 다소 무지했던 결과가 아니었는지 자문하고 싶다.

[그림 1] 충청 · 대전 지역의 17-19대 총선 결과 추이



※ 19대 총선에서 신설된 세종시는 편의상 충남으로 합산하였으며, 18대 충남 논산에서 당선된 이인제(당시 무소속) 의원은 그후 선진당에 입당하였기에 선진당으로 계산하였음.

지난 두 차례 총선과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의 패권은 지역 정당인 선진당과 민주당이 양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열풍이 거셌던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충북과 대전에서의 싹쓸이를 바탕으로 충청 전체의석(24석)의 79.2%(19석)를 독식하는 이변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18대 총선에서는 선진당이 대전과 충남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1당(62.5%)으로 등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 수도권에서 압승하였던 한나라당은 유독 충청지역에서만은 단 1석(제천 · 단양)만을 건지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19대 총선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선거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새누리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충청지역에서 제1당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충북(5석/8석)에서의 선전과 대전(3석/6석)과 충남(4석/11석)에서의 고른 득표에 힘입어 최초로 충청 지역에서 제1당이

되었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특징은 13대 총선 이후 충청지역의 패권 정당으로 군림하여온 선진당의 몰락이다. 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충청 지역의 제1당(15석) 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당 대표인 심대평 후보가 세종시에서 제법 큰 표 차로 낙선하는 등 충남에서 단 3석만을 얻는데 그쳤다. 선진당의 몰락과 새누리당의 강세는 정당 투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은 처음으로 충청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면 선진당은 18대 총선에 비해 절반에 그친 지지를 얻었다.

[표 1] 충청 · 대전 지역의 정당투표 현황

정당 투표(%)	전국	대전	충남	충북
새누리	42.8	34.3	36.6	43.8
민주	36.5	33.7	30.4	36.0
선진 (18대)	3.2 (6.8)	17.9 (34.3)	20.4 (37.8)	5.3 (13.7)
진보	10.3	9.0	6.8	7.7

또 하나 충청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시적 특징은 여야 구분 없이 사회적 배경으로는 고위 관료 출신이, 성별로는 남성이, 선수로는 다선 의원의 비중이 여느 지역보다 유달리 높다는 점이다. 먼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47명(15.7%)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역구의원 역시 지난 총선보다 5명이 늘어난 19명이 당선되어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하지만 충청 지역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아니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이 지역의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은 김옥선(9대와 12대) 의원 단 한명 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통틀어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성 국회의원인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충청 지역에서 여성후보는 97명 중 단 5명뿐으로 전국의 평균에 못 미쳤고(그중 무소속의 박근령 후보는 중도

사퇴), 당선된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선과 재선의 비중은 낮고 3선 이상 다선의원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19대 국회의 6선의원은 단 3명뿐인데(강창희, 이인제, 이해찬), 이들 모두는 정당은 제각기 다르지만 충청의 지역구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끝으로 고위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중앙정치에서 공직경험을 하였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금의환향 패턴'이 지배적인 점 역시 눈에 띈다.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장차관, 청와대비서관, 행정(정무)부지사, 시장, 구청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학계 인사는 12명에서 17명(5.7%)으로 늘었고, 시민단체 인사도 8명에서 15명(5.0%)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충청지역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상근 활동가 출신 당선자는 찾기 어렵다.

[표 2] 여성의원 현황

	후보 등록율(%)	지역구 의원(%)
전국	7.1	7.8
충청	5.1	0.0

[표 3] 선수 현황

	전국(300명)	충청(25명)
초선	148명 (49.3%)	11명 (44%)
재선	70명 (23.3%)	3명 (12%)
3선	50명 (16.7%)	6명 (24%)
4선	19명 (6.35%)	2명 (8%)
5선 이상	13명 (4.3%)	3명 (12%)

2. 분석 : 민주당 10년을 먹여 살린 세종시 잔치가 끝났다

19대 총선을 충청지역에만 한정한다면 그리 큰 이변이라 할 수 없다. 충청지역의 1차(『충청투데이』 3.19)와 2차(『충청투데이』 4.5) 여론조사는 선진당의 약화와 새누리당의 선전 가능성을 분명하게 예측하였다. '18곳 중 16곳 적중 신뢰도 증명'

(『중도일보』 4.13)하였다는 한 신문사의 자평은 다소 과장은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충청지역 유권자의 표심 변화의 기폭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2010년 6월 29일 박근혜 의원의 결단에 있었다. 이날 박근혜 전대표는 5년 2개월 만에 본회의 발언에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위헌 소송은 물론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세종시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문제였으며,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가치나 깃발 이전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충청인으로서 자존심의 문제였다. 충청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박근혜를 구분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당명과 로고의 혁신이나 정책의 좌 클릭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막강한 위압과 권력에 맞서 세종시를 지켜낸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은 급등(35.8%)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3%가 높은 48.8%를 기록하였다(『시사온』 2011.7.14). 한 보수언론의 표현대로 충청지역에 불어 닥친 박근혜 바람의 뿌리에는 "세종시를 만든 건 노무현이나 박근혜가 원안 약속을 지켰다"는 이심전심의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조선일보』 2012.4.13). 새누리당의 약진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충청지역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은 간접 해석일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종시나 과학도시가 불거졌을 때 지역정당인 선진당이 보여준 무능력과 분란은 선진당의 참패를 예고하였다. 18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실패한 선진당은 4대강 사업, 친환경무상급식, 한미 FTA 등 18대 내내 제3당으

로서 캐스팅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특히 2009년 심대평 지사의 선진당 탈당과 복당 등 이회창 총재와의 잦은 당권 다툼은 선진당의 리더십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정적으로 2010년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회창이 당 총재직을 사퇴하자 선진당은 유력 대권후보 없는 정당이자 노후화된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충청지역의 선거 결과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정상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생산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한나라당의 정치적 주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추구하였던 수도권 중심주의(김문수의 빅수도론이나 박세일과 정운찬의 세종시 결사반대)에 대한 완강한 거부, 즉 정책적 차이였지 이념 갈등이 아니었다. 또한 민주당의 약진은 마치 1987년 13대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 속에 노태우의 당선을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선진당이라는 두 보수정당의 구조적 분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번 19대 총선은 여야 할 것 없이 13대 총선 이래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강 구도에서 치러졌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이러한 양강 구도를 촉발하였고, 차기 대권까지 상실할지 모른다는 여권의 심각한 위기감은 친박과 친이의 갈등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제3 세력의 존립 여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전개된 이러한 구도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강원도나 충청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햇볕정책 10년, 세종시 10년의 정치적 유효기간이 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나아가 야권연대가 전멸한 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와 정책, 인물을 발굴하지 못한 민주당 리더십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만큼 지역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광재 전지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거꾸로 초선인 박수현(공주)과 박완주(천안을)의 당선은 안희정 지사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중원의 복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햇볕정책과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 민주정부와 이후 민주당을 지탱해온 핵심 정책이념(policy idea)이었다. 남북평화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메타 이슈였다. 한편으로 그것은 지역차원에서는 오랫동안 보수의 영토였던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유권자의 재편(realignment)을 가져온 중부권 공략의 성격도 갖고 있다. 둘 모두 정책정당의 성격을 강화하였고 충성스런 지지자를 대규모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모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전략이 요구된다. 과거의 지역정책들은 특정 지역에 자원을 몰아주어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이었다. 신공항, KTX, 과학도시, 박람회 유치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물량위주의 성장전략의 범람은 자원의 왜곡을 낳으며, 반면 특혜의 집중은 소외를 낳는다. 충청지역은 이미 고속도로도, KTX도, 신도시도 가득 차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대전, 천안, 청주의 순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책의 중심을 공간적 접근에서 계층적 접근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해방 이후 60년 동안 보수정당들은 민주화라는 태생적 한계를 제외한다면 성장과 반공, 상층계급(upper class)의 번영에 일로매진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반면, 진보개혁 정당들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뒤바꿀 진보의 4대강 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反자연의 토건국가가 아니라 고용, 교육, 의료, 평화의 녹색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천안과 춘천은 이제 서울에서 전철로 한 시간이면 닿는다.

점차 지역 정체성보다는 수도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젠 사회정책을 씨줄로, 계층담론을 날줄로 한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신형 정책 그물이 요구된다. 맞춤형 지역정책의 개발은 중앙정치나 전국정당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의 몫이다.